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추진

광주·전남 긴장 고조

노조 “투표 강행”…지자체 “원천 차단”

광주시·전남도 내 공무원 노조가 이른바 3대 공무원 노조의 통합과 민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강행하기로 하자 각 자치단체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 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단체에 소속된 광주시 일선구청, 법원 조합원들이 오는 21~22일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10월 통합, 12월 출범’을 목표로 잡았으며, 통합은 과반수 투표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민노총 가입은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민공노 소속인 동, 서, 북, 광산구 공무원 2천70명 가량이 투표에 참가할 예정이다.

광주시 분청과 남구청은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소속으로 투표 대상이 아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목포와 광양·곡성·구례·고흥·해남·영암·신안·강진·완도군 등 6개 시·군 공무원 5천9명의 표결 참여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따라 광주시, 전남도는 물론 각 자치단체가 투표행위의 원천 차단에 나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근거로 최근 각 구청과 전남도 자치단체에 공문을 전달, 공무원들의 표결 자체를 촉구했다.

이 지침에는 조합원들이 일과시간에 투표관련 회의를 이유로 무단으로 자리를 뜨거나, 투표 당일 근무시간에 투표하는 행위, 그리고 투표함을 들고 순회하는 등의 행위를 ‘불법행

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 중 행정인력을 투표 업무에 지원할 경우 감독자까지 포함해 문책토록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이 담겨있다.

시·도가 공무원들의 투표 저지방침을 밝힌 것은 전공노(조합원 4만7천여명), 민공노(5만6천명), 법원노조(8천500여명) 등이 통합할 경우 11만명의 거대조직이 되는 데다, 민노총에 가입하면 노동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실정법상 공무원 단체행동권과 정치개입 금지조항에도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에도 광주·전남 공무원 노조는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은 물론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된다.

민공노 최종덕 광주본부 사무처장은 “정부의 투표저지 방침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각 구청별로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추석맞이 바쁜 청과물시장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각회동 농산물공판장. 추석을 앞두고 산지에서 올라온 과일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다. 최상품 기준으로 사과(홍로)는 15kg들이 한 상자에 5만5천원, 배(신고·15kg)는 3만~3만5천원, 포도(캠벨·5kg)의 경우 2만원 수준에 거래되는 등 명절을 앞두고 오른세다.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각회동 농산물공판장. 추석을 앞두고 산지에서 올라온 과일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다. 최상품 기준으로 사과(홍로)는 15kg들이 한 상자에 5만5천원, 배(신고·15kg)는 3만~3만5천원, 포도(캠벨·5kg)의 경우 2만원 수준에 거래되는 등 명절을 앞두고 오른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4대강 사업’ 지역업체 결국 배제

국토부, 일반공사 분할 발주 금지…수도권 대형업체 싹쓸이 할 판

지역 중소기업업체들 반발

정부가 전남도 등 지자체가 발주하는 4대강 살리기 일반사업의 분할 발주를 원천 봉쇄하고 나서 지역 중소기업업체들이 집단 반발할 태세다. 지자체 공사의 분할 발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턱키 공사에 이어 일반공사까지 수도권 대형업체가 싹쓸이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17일 “국토부로부터 최근 ‘4대강 살리기’사업과 관련해 공공 분할 발주를 금지하는 공문을 받았

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내려보낸 공문은 ‘오는 2011년까지 대규모 공사를 마쳐야 하는 점을 고려해 발주방식과 공공

단위를 결정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를 금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이달 말 일반공사로 발주하는 ▲섬진강 1공구(섬진강 하구둑~전남·북 경계까지 95.6km·총 사업비 677억)를 비롯, 내년 초 발주 예정인 ▲영산강 1공구(영산강 하구둑~함평천 합류점까지 37.9km·“ 476억) ▲영산강 8공구(담양군 봉산면~담양읍 금월교까지 22.2km·“ 240억) 등 3개 공구에 대한 분할 발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지역 건설업체는 정부의 분할 발주 금지 방침은 사실상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발주된 턱키공사(설계·시공 일괄 공사)의 경우 중소기업체들의 참여가 힘든 상황에서 일반공사의 공공 분할 발주를 금지하면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참여는 더 힘들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체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 국가 발주사업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자체 발주 공사는 분할 발주해 더욱 많은 업체의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

탔이 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

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정부의 분할발주 금지 지시는 4대강 사업을 수도권 업체에 몰아주려는 처사”라며 “공공 분할 발주” 허용을 정부, 자치단체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늘 개막 ▶3·12면

